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참사...진입 소방관 2명 순직

### 급격한 화염 확산·유증기 폭발 추정...현장 대응 중 고립 노후 시설·가연성 자재 겹쳐 피해 키워...원인 규명 착수

전남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급격한 화염 확산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진압 작업을 벌이던 대원들이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8시 31분 선착대를 투입하고,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초기 진압에 나선던 대원들은 한 차례 철수 후 상황을 재점검했으나, 추가 연기가 확인되면서 2차 진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전 9시 2분께 내부에 있던 소방관 2명이 연락이 끊기며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서 오전 10시 2분께 완도소방 소속 A소방위(44)를, 이어 오전 11시 23분께 해남소방 소속 B소방사(31)를 각각 숨진 채 발견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A소방위는 자녀 1

남2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희생된 B소방사 역시 최근 웨딩 촬영을 마치고 올해 10월 결혼할 예정이었던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장 관계자 1명(59)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로 창고 1개 동 대부분이 타거나 그을렸다.

화재는 인력 115명과 장비 39대가 투입된 끝에 오전 11시 26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사고는 냉동창고 내부 작업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당시 공장에서는 바다 재포장과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페인트 제거를 위해 사용한 토치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특히 바다에 시공된 에폭시 등 가연성 물질과 건물 일부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불길 확산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천장 등에 채류하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화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난 불로 내부에 진입하던 소방관 2명이 숨졌다. 사진은 진화와 수색 작업 벌이는 소방당국.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이 1차 진입해 화재 진압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며 “이어 상황 판단 회의를 하던 중 다른 곳에서 연기가 보여 2차 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진입 과정에서 천장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폭발했다”며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여 지휘

과 관련해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면서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삼가고 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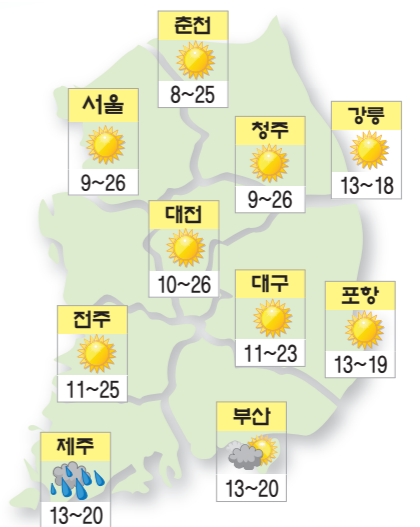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타고 관련해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면서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삼가고 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6:04	달림 03:34
맑음 19:03	달림 14:31



광주	11~24
목포	11~21
여수	12~20
순천	12~23
구례	10~24
광주	12~21
신도	10~20
흑산도	10~15
고흥	10~21
진도	13~19

목포	미물(고)	10:56 / 23:16
	쌀물(저)	03:59 / 17:01
여수	미물(고)	06:40 / 18:42
	쌀물(저)	12:52 / --:--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은?

## 광주·전남, 감량·재사용 낮고 ‘소각 확대’

### 감량·재사용 취지 어긋나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감량과 재사용보다는 소각시설 확충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까지 약 4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파악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취지인 ‘폐기물 감량’, ‘순환경제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보다 처리 방식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도 여전히 매립과 소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총 처리량 가운데 공공 매립과 소각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재활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직매립 금지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감량 정책 부재로 인한 공백이 소각 확대와 외부 위탁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완도군은 감량 정책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순천·나주 등 21개 지자체는 소각장 신설·증설 또는 민간 위탁 확대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응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순환경제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보다 처리 방식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도 여전히 매립과 소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총 처리량 가운데 공공 매립과 소각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재활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직매립 금지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감량 정책 부재로 인한 공백이 소각 확대와 외부 위탁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5·18기념재단, 5·18 헌법적 가치 재조명

## 6월2일까지 ‘오월, 헌법의 문장이 되다’ 기획전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 확산을 위한 기획 전시가 마련됐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6월2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오월, 헌법의 문장이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전문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

점에 맞춰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헌법 전문이 가진 딱딱한 법률적 이미지를 탈피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 내용은 ‘헌법 전문이란 무엇

인가’, ‘지금 우리 헌법 전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오월은 왜 헌법에 담겨야 하는가’, ‘헌법 개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등 5개 주제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단순한 문구 추가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미래사회의 갈등을 통합하는 시대적 과제를 알릴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공공의료 정책토론회

## “행정통합 대응 위해 공공의료 시설 확충해야”

### 권순석 교수, 필수로 네트워크 고도화·예산 확충 강조 의과대학 대비 기반 조성·공공형 의료서비스 등 제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초광역단위의 다양한 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 보건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 5층 회의실에서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보건 의료의 새로운 여건을 말한다’란 주제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공공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순석 전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의료 과제 및 실행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필

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광주는 의료기관, 병상은 많지만 중증치료가 가능한 곳은 7대 광역시 중 인천, 울산에 이어 5위 수준이다”며 “전남 대다수 지역은 응급·분만의료 취약지역으로, 인구 1000명당 중증치료 가능 병상수는 2.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2025년 12월 기준)는 각각 27.8명, 23.1명이지만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검률은 타 지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연합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보건 의료기금을 조성해 공공보건 의료 예산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광주 의료원 설립과 중증·응급분야 순환망 등도 협력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포괄2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진료기능 강화도 필수조건이다”고 밝혔다.

전남 의과대학 관련해서는 지역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분산 배치하면 오히려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지현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 5층 회의실에서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보건 의료의 새로운 여건을 말한다’란 주제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공공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경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 역본부장, 김기현 울바른 공공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해 각 영역별 정책 필요성과 현장 요구를 짚었다.

27년간 강진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신경숙 본부장은 “의료격차 문제는 생명권 불평등으로, 15년 전만 해도 강진 의료원에 환자가 오면 응급처치를 한 뒤

목이 있는 공공의료원 기능 확충과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의료취약지, 원거리 지역에 전남 각 시군과 대학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공공형 의료서비스(메디컬 연계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전남 의과대학 신설에 대비해 안정적인 교육·수련·진료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이후 도시·농촌·도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건강강(가칭)’ 신설과 통합특별법에 명시된 공공보건 의료재단을 설립해 현재 민간위탁기관에 분산돼 운영 중인 각종 지원단, 센터를 이관하고, 독립법인으로 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상습 주취 폭행범 또 실형

두르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일으킨 60대 주취폭행범에게 또다시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영호 재판장은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0시2분 광주 광산구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씨(54·여)를 가격해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같은해 3월21일 광산구 다른 주점에서는 피해자 C씨(63)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력을 썼으며, 같은달 31일 오후 1시20분 D씨(63·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리잔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